"李는 눈사람 같은 후보 햇볕 들면 지지율 녹아"

정동영, 부산서 지역통합행보 시동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25일 범여권의 불모지인 부산 지역을 찾는 것으로 '전국 투어' 일정을 시작했다. 정 후보는 특히 이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눈사람 같은 후보"라고 평가하며 확실한 각을 세웠다.

정 후보의 이번 부산 방문은 지난 15일 후보 확정 후 첫 지역 방문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후보 필패론'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눈사람은 덩치가 크지만 햇볕이 들면 녹아 없어지고, 반나절만 지나도 크기가 반으로, 사분의 일로 줄어든다"며 "50% 지지율과 대세론을 믿지 않는다. 대세론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정 후보는 또 "5년 전 대선이 '올드'와 '뉴'의 충돌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충돌이라는 또 하나의 전선이 있다"며 자신을 '좋은 성장, 좋은 경제', 이 후보를 '나쁜 성장, 나쁜 경제'라고 주장한 뒤 "수나라 때 팠던 운하를 1천300~1천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판다면 중국인들이 뭐로 보겠느냐.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불행한 경제가 된다"고 이 후보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부산시민을 위한 공약으로 부산을 항만(sea port), 항공(air port), 대륙철도(TCR/TSR)의 3대 물류허브로 만드는 '3포트' 계획을 소개했고, 소말리아에서 피랍된 마부노호 선원의 석방을 위해 당내 대책위를 꾸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후보는 2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부산 방문에서 법연원 특별천도재에 참석한 뒤 경남 합천 해인사로 이동, 조계종 종정인 법전 스님을 만나는 등 '불심' 껴안기 행보를 이어갔다.

정 후보는 또 26일에는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광주에서 실업계고교를 방문, 사교육비 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음주에도 전국 투어 일정을 이어가며 일자리·노후·교육·주거 등 4대 불안 해소대책을 차례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력에 전북 출신 많지만 경제 걱정하는 사람 없어"

이명박 전북서 "새만금 특별법 통과" 주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5일 '국민성공 대장정'의 두 번째 코스로 전북을 방문, 대세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광주에서 첫번째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한나라당의 불모지로 여겨지는 호남을 또 다시 방문, 지지층 확산을 시도했다. 전북은 특히 범여권 후보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고향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 후보는 특히 이날 오전 전북 부안에 위치한 새만금 전시관을 찾아 전북지역 상공인 30여 명과 '새만금과 전북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오는 길에 한나라당 소속인 국회 법사위원장, 간사와 통화했다"며 "새만금 특별법만은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서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필요한 보완은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전북이 정 후보의 텃밭임을 의식 한 듯 "그동안 전북은 경제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전북이 드디어 정치 마인드에서 경제 마인드로 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오후 전주에서 열린 '국민성공대장정 전북대회'에 참석, "전북이 힘이 없어서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니다"며 "지난 10년간 권력 중심에 전북 사람들이 많았지만 전북 경제가 어렵다며 걱정을 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5년전과 지금도 전북 출신이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전북은 뭐든지 (16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게 몇 개 있다. 16개 시도에서 1인당 GDP가 최하위다"라고 주장하며 정 후보 등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도 지난달 중앙선대위 발대식과 지난 22일 광주 필승결의대회에서 보여줬던 '탈 여의도식 파격'을 계속했다. 그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전북 지역의 대표적 휴먼 성공스토리의 주인공들을 소개한 뒤 이들과 '토크쇼'를 진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BBK 주가조작 의혹 공방

법사·정무·문광위 국감

국회는 25일 법사, 정무, 문광 등 13개 상임위별로 9일째 국정감사를 실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과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정무위 등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또 경인운하와 서울대 입시안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BBK·현대상선주가조작 사건 = 정무위의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김재홍 의원은 "BBK주가조작 의혹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경준씨의 조기송환을 촉구했다.

신당 김영주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 주가조작건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조사대상에 올라 있다는 설이 있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법무장관과 금감위원장이 국회에서 이 후보는 BBK와 무관하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조작 사건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정치공작 중단'을 요구했다.

◇경인운하 = 대통합신당 문학진 의원은 이날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인운하사업은 지난 96년 타당성 조사를 한 이래 주민들과 정치인, 환경단체들의 찬반논란으로 11년째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며 "경인운하보다 30.7배나 길고 432배나 많이 땅파기를 해야 하는 경부운하를 11.8배의 예산으로 4년 만에 끝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경인운하사업이 중앙정부와 인천지역 환경단체의 갈등이라고 인천시장이 소극적으로 정부의 결정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운하사업을 위해 쏟은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사업 중단은 그 자체로 큰 손실이며 이 사업을 기대했던 인천시민의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의 국감〈10월 26일〉

▲재정경제위 = 광주세관(오후 2시·관세청)

전군표 국세청장 내주 소환

검찰 "국가 중요사안 수사 신속 마무리"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상납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이번 사건을 조기에 끝내기로 하고 빠르면 내주 중에 전군표 국세청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24일 오후 급히 상경해 대검찰청에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수사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계획 등을 보고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보고 자리에서는 국가 세무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사를 원칙에 입각해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짓는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안다"고 25일 전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도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사건"이라며 "더구나 정상곤 전 청장의 진술이 (언론보도와는 달리) 오락가락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수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26일로 예정된 정상곤 전 청장의 재판을 내달 9일로 연기해 주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소한 내달 9일까지는 정상곤 전 청장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물증을 찾아내 전군표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를 최종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상곤 전 청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4~5차례에 걸쳐 국세청장에게 전달한 돈 6천만원은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합친 금액이라고 정 전 청장이 검찰조사 당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곤 전 청장은 검찰조사 당시 미화 1만달러를 비롯, 현금 5천만원을 전군표 청장이 홍콩, 중국, 뉴질랜드 등 해외출장때마다 한번에 1천만~2천만원씩 경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상곤 전 청장의 이 같은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공항입출국 기록을 이미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25일 오전 침통한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코앞…'정치 역풍' 피하자

■ 檢, 정상곤 '상납수사' 가속도 왜?

김태현 부산지검장, 총장에 보고 '이례적'

검찰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상납비리'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 될 경우 정치적인 역풍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24일 오후 급히 상경해 대검찰청에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수사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계획 등을 보고했다.

단일 사안을 놓고 지방의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번 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날 보고 자리에서는 국가 세무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사를 원칙에 입각해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짓는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안다"고 25일 전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밤 늦게 정 전 청장의 상납관련 진술내용을 청와대에 급히 보고한데 이어 23일에는 부산지법에 26일로 예정된 정 전 청장의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법정에서 정 전 청장이 상납과 관련,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경우 검찰수사가 법원의 재판을 뒤따라가는 형국이 된다.

반대로 정 전 청장이 "금품 수수 진술은 잘못 전달됐다"며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수사에 더 큰 혼선이 빚어지는 사태를 염려해 재판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행보로 미뤄 검찰은 이번 수사를 오래끌다가는 대선 국면을 앞두고 정치적 역풍을 맞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달 초순을 넘기면 정국이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전환돼 국세청장에 대한 '상납의혹'이 여야의 정쟁거리가 되면서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정권의 핵심인 국세청장이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을 호재로 삼아 검찰을 압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부담이 커지고, 수사 진정성도 왜곡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국세청이라는 막강한 조직의 위상과 직원의 사기 등을 고려, 수사를 조기에 끝내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연합뉴스